

김영진 사무관
(02-2100-2973)
이명규 팀장
(02-3145-8521)

- 1 -

②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

-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

*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·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

- 한편,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

③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

-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

*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,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

3 기대 효과

- ☐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,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·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
- 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
- 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

4 시행 시기

- ☐ 공포 후 즉시 시행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